

미래형 글로벌캠퍼스 조성 본격화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해야”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부지교환 절차 완료

남원시가 전북대학교와 추진해 온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부지교환 절차가 11월 26일자로 모두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지 교환은 남원시 공유재산인 **舊 서남대 부지**(토지 66,213㎡, 건물 45,660㎡)와 국유재산(토지 86,981㎡, 건물 1,419㎡) 등 총 203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교환으로 남원시가 확보한 국유재산은 **舊 남원세무서, 시립도서관 부지, 합파우 아트밸리·가야고분군홍보관 부지** 등 주요 공공·문화사업 부지와 도로·하천 등 기반 시설 용지를 포함한 토지 200필지와 건물 3동이다.

서남대 부지는 폐교 이후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됐지만, 남원시·국립대·국가기관이 얹힌 복잡한 재산 구조가 걸림돌이었다.

특히 시 소유 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해야 하는 절차는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고난도 행정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캠코·전북대 등 여러 기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해, 남원시는 수차례 현장실사, 재산가액 분석,

교환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직접 구축하며 난제를 해결해 왔으며, 이번 교환 완료는 이러한 꾸준한 행정 노력의 결실이다.

부지교환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남원시가 보유하고 **舊 서남대 부지**는 교육부 사용승인 후 전북대학교의 교육용 재산으로 공식 편입될 예정으로, 폐교였던 공간은 교육·문화·창업 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글로벌캠퍼스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남원지역은 그동안 서남대 폐교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 상권 약화 등을 겪어 왔지만, 이번 성과를 계기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리모델링과 정주여건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대는 12월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에는 본격적으로 설계와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남원시는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유치를 목표로 주거·문화·교통 등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외국인 통합지원 거

점센터 구축, 청년 및 유학생 주거대책 마련, 캠퍼스 주변 상권 활성화, 창업·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부지교환은 단순한 재산 교환을 넘어, 지역소멸 시대에 남원이 선택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청년, 유학생, 창업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도시 안에 만들고, 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마련된 셈이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전북대 글로벌캠퍼스 조성과 연계된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폐교를 미래로 전환하는 남원형 고등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부지교환 완료는 끝이 아니라 남원 미래를 여는 시작이라며, 지자체·국가·대학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을 바탕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중 2027년 개교까지 정주·교통·문화·주거 인프라를 빈틈없이 갖춰 남원을 글로벌인재가 모이는 교육도시로 재 탄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표창·공로패 수여·축하공연 등 진행

남원시는 지난 26일 약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청아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제20회 남원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앞두고 그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 온 한해 자원봉사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또한 5개 부문(남원시장상, 시의회의장상, 국회의원상, 교육장상 등,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에서 자원봉사 유공 단체 및 개인 3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서 오랜 기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해 온 김진석 씨에게 공로패가 전달되었고, 자원봉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남원시의회 이



숙자 의원에게 감사패도 수여되었다.

이어 축하공연으로 남원시립국악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온 자원봉사자들에게 특별한 무대로 보답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남원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 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고추 생산성 향상 신기술 현장 실증 연구 박차

임실군이 고추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총 1억 500만 원을 투입해 현장 실증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노지 고추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활용, 바이오차 차등 사용 재배, 고추 비가림(시설) 양액재배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실증을 통해 기후 변화 시대의 안정적 고추 생산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군은 노지 재배 환경에 적합한 자동 관수·관비 기술을 개발·보급해 노동력 부담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저탄소 농업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차를 고추 재배에 적용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재배 기술 정립도 추진 중이다.

비가림 양액재배 실증에서는 연작장



해와 병해충 발생률을 낮추고, 차광재 사용 및 환기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고온으로 인한 생리장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임실=전종영 기자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27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및 전쟁 희생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권위주의 시기 등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적대세력·외국군·공권력 등에 의해 희생됐음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 주체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는 피해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의 도덕적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가족관계 파괴, 생계 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고 이를 증명하거나 명예를 회복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많은 유족들이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의 존엄과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순창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반을 법적 구제대상에 포함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 절차를 규정한 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추모·유족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 및 예산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과거의 아픔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과거를 다시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용수 순창군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강조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27일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군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순창군의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 참여와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라며, 이제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이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총예산이 973억원에 달하는 만큼, 현행 국40%·도18%·군42% 분담 구조는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순창군과 의회가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대를 건의한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분담률을 국50%·도30%·군20%로 조정한 수정안이 의결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순창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기존 복지사업 일부 조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특정 집단의 복지 축소가 아닌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임을 군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기본소득이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에 기여해 군민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회·행정·군민이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고령사회의 대응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노인일자리에는 올해와 같은 총 3,380명 규모로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2,060명), 노인역량활용형(1,100명), 공동체사업단

(120명), 취업지원형(100명)으로 나뉘며,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일부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순창읍 노인회관 2층에 있는 순창시니어클럽에서 상시로 접수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별도 일정에 따라 접수가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임실군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납(일시 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번엔 신청하면 기존에 매년 2회(3월, 9월)에 나누어 납부하던 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접수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위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CD/ATM, 금융기관 방문,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월과 9월에 정기분 납부해야 한다.

/임실=전종영 기자

순창군, 겨울철 대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실시

순창군은 지난 26일 구립면 운향길 119 일원에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대설대응 장비기능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순창군청을 비롯해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773부대 3대대, 자율방재단, 지역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백호우, 트랙터, 제설차, 보행 제설기, 경인차 등 10대의 제설장비가 동원되어, 실제 고립지역을 가정한 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훈련은 대설대응 제설장비 기능 조작 훈련뿐 아니라 도로에 전기가 방전 상황을 설정하여 이동불가에 따른 견인 조치 훈련도 실시했다.

아울러, 순창군은 자율방재단에 보행용 제설기 4대를 추가 지원하여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